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1. 대한한돈협회	14.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 전국한우협회	15. 한국동물약품협회
3. 한국낙농육우협회	16. 한국단미사료협회
4. 한국육계협회	17. 한국대용유사료협회
5. 대한양계협회	18. 한국종축개량협회
6. 한국토종닭협회	19. 한국축산물처리협회
7. 한국오리협회	20.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8. 한국양봉협회	21.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9. 친환경축산협회	22.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10. 대한수의사회	23. 축산신문
11. 농협 축산경제지주	24. 한국축산경제연구원
12. 한국사료협회	25. 한국사슴협회
13. 한국육가공협회	

2024. 12. 31.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대한한돈협회 대표자명 손 세 희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전국한우협회 대표자명 민 경 천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단체명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대표자명 이 승 호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사)한국육계협회 대표자명 김상근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사)대한양계협회      대표자명      오 세 진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표자명

문정진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들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한국오리협회 대표자명 박하담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사)한국양봉협회 대표자명 박근호 서명



(붙임 1)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축산농가 대표자명 이대선 서명 

(붙임1)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대표자명

허구경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농협경제지주

대표자명 안병우 (안병우)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대표자명



214-82-003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6(서초동)

한국사료협회

회장 허영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사)한국육가공협회장 고훈주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년 12 월 25 일

단체명: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표자명: 김용철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표자명 김기영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한국단미사료협회 대표자명 이상길

이상길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사)한국대용유사료협회

대표자명 최재국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사) 농촌공간정비사업협회

대표자명 이재원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표자명 김명규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대표자명 송석찬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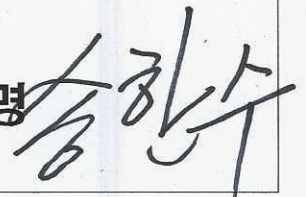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회장 송 한수 서명



(붙임 1)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사할추경위생축협회 대표자명 김광호 서명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축산신문 대표자명 이상호 서명 이상호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표 이상철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연대 서명문

대한민국 축산업은 연간 60조원의 산업규모와 5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의 핵심 식량 안보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중인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어 철거 및 이전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더 이상 이전할 장소도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민원 증가로 막다른 길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축사를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
2. 사업지침에 축사의 경우 반드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토록 명시
3. 사업계획서 심사시, 이전을 원하는 축사의 경우 이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선정(불가피한 폐업 방지)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기 사항을 반영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단체명 (사)한국사슴협회 대표자명 회장 이 해 곤 서명